

##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그리고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남가람 신도시’라는 이름도 참 정감 있고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든 고향을 내주면서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과 진주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물을 보았습니다만 매우 마음이 든든합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산업지원 거점도시로, 친환경 명품도시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

니다. 진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 그리고 우수한 교육여건은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 지역의 대학들이 MOU를 체결해서 튼튼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공공기관은 지방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은 진주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서부 경남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마산·창원의 첨단 기계공업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서 경남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주 혁신도시가 경제는 물론, 교육과 환경, 문화,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기관 직원 가족 여러분이 마음 놓고 내려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중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

에 세 배가 넘는 880건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8 대 2가 아니라 4 대 6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3년 65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으로 약 2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세로 건어서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를 만일에 지방세로 바꾸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는 액수가 991억 원인데, 경상남도에서 납부한 종부세 수입은 13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경상남도에는 8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손실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방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적하고 싸워서 그 뒤에 이것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비슷한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중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걷힙니다. 중앙정부는 이것을 교부세의 방법으로 지방으로 배분하는데 서울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보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따져 봐야 될 일입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했고, 오늘 경남에서 진주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뜹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 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4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공간정책’ 이면서 ‘혁신 정책’ 이고, 또 ‘산업 정책’ 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에 펼쳐질 10개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이 따라오게 되고, 이들이 지방 대학 등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서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교통·교육·의료·문화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특성 있게 가꾸어 나가면 전 국토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현재 64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교육·농촌·건설·복지 등 여러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인적 자원 정책입니다. 인재를 있어야 기업도 오고 지역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그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법학대학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지역을 위한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특화 발전특구, 농업클러스터는 말할 것도 없고,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 정보화 마을 모두가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같은 조건이면 반드시 지방을 우선하고, 설사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지방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도로와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이고, 건강증진사업에서 문화시설 하나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은 꼭 지방만을 위한 정책만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에 숨통을 틔게 되면 말하자면, 지방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공간이 넓어지면 수도권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을 넓고 푸르게 활용함으로써 첨단 지식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총생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 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어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어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은 종류도 많고 매우 복잡해서 자칫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정책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본고사가 부활되고 내신이 무력화되면 특목고와 수도권 학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모든 학생은 이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지방고등학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에서조차 대학자율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균형발전정책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확대는커녕 이제는 지키기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느 정부도 이를 되돌리거나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기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